

Thematic Radar

Ep. 42 위협받는 미국-EU 무역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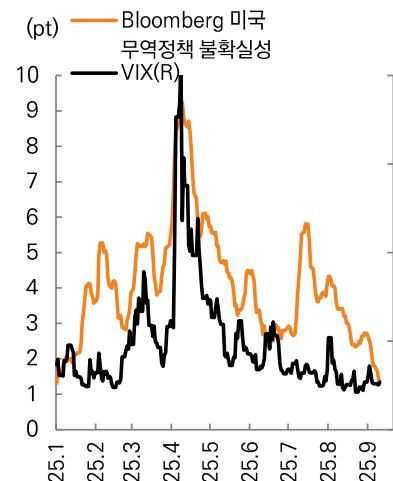
- 7월말 체결된 미국-EU 무역합의는 EU의회의 반발에 직면. EU에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불만 표출
- 공식 성명서에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전 EU의 관세 인하를 먼저 요구. EU의회의 동의 필요
- EU의회의 반대로 인한 일부 항목의 재협상, 미국의 요구사항 거절로 인한 보복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

EU의회에서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모습이다. 전일 EU집행위원장은 EU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EU 무역협정을 유럽 기업들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의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집행위원장이 속한 EPP 정당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연립 파트너가 되어준 S&D 그룹은 합의가 EU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기업들은 지난 8월말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가 400여가지의 관련 상품(derivative product)로 확대되면서 적용받는 실효 관세율이 15% 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례로 20% 철강 함유량을 보유한 기계 수출품의 경우 상품 가치의 20%는 50% 관세가 적용돼 실효 관세율은 22%로 올라간 상황이다. 최근 집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EU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무역합의가 굴욕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EU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EU의회의 반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명서의 조건 때문이다. 미국-EU 무역합의 성명에 미국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전에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내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관세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EU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PP는 188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136석을 가진 S&D의 지지를 잃으면 ECR, PFE 같은 강경 보수 그룹으로부터 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RN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PFE가 연설 이후 폰데레이엔 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반대 성향의 The Left 그룹도 불신임 투표안을 제기한 만큼 S&D표를 메꾸는데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의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집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에 돌입해야 되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재차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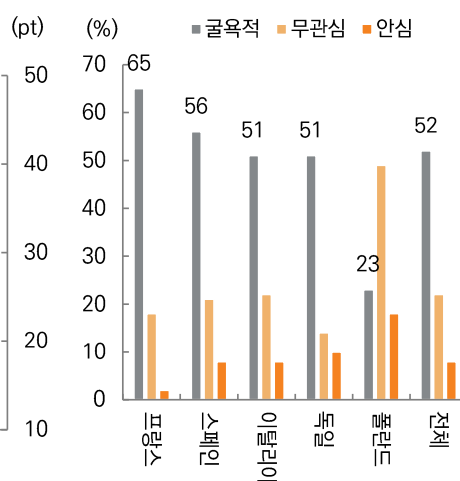
미국의 압박도 무역합의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 및 테크 규제 추진 중단, 이번주에는 러시아 원유 수입국인 중국, 인도에 100%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자고 압박했는데, EU 입장에서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 상승은 약화된 고용시장으로 경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EU 관계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무역 정책 불확실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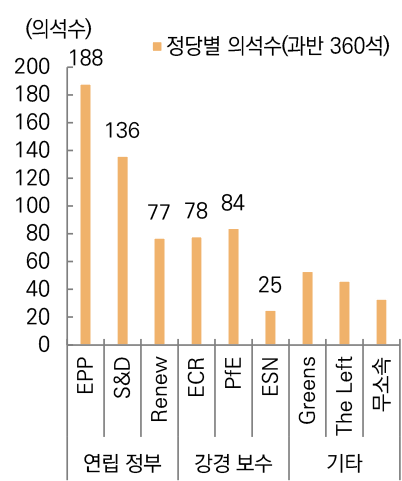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EU 무역합의에 대한 여론



자료: Euronews(8/30~9/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EU의회 구성



자료: European Parliamen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